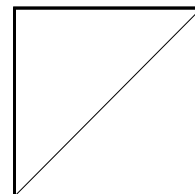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1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11. 12. (제 20 차)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1. 11. 12.

1. 의결주문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대하여 케이비증권(주)에게 업무의 일부 정지(6월) 조치하고,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공모주 차별배정’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 「자본시장법」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1호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 「자본시장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1호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4호 라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 기준) 제1항 및 제4항
-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관계부서 협의

- 제24차~제26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0.29, 11.5, 11.10) 심의필
- 제21차, 제2차, 제3차 및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2020.11.25., 2021.1.20., 2.3., 2.8.) 심의필
- 제4차, 제6차, 임시 제3차, 제14차 및 제20차 안전검토 소위원회 (2021.2.26., 3.26., 5.27., 7.16., 11.5.) 심의필

<별지>

케이비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174백만원 부과**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증권선물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 부과를 수정 심의

- 케이비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의 OEM 펀드에 TRS를 직접 제공하지 아니한 9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공모주 배정 관련 수요예측에 따른 차별적 물량배정은 청약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미해당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 내용에 따라 의결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합계액은 694백만원임

- 조치사유(업무의 일부정지 6월) :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조치사유(과태료) :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공모주 차별배정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제71조 제7호, 제420조 제3항,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제4호 라목, 제7호, 제39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2. 조치사유

가.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① 케이비증권은 20××.×월말 ◇◇펀드를 대상으로 케이비증권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령한 신탁재산 명세서 등을 통해 ◇◇ ◎◎ ◎◎ 1.5Y 3호 펀드의 TRS 계약을 통한 투자대상인 ◇◇ ◆◆◆◆ ◆◆-◆ 펀드가 A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지 않고,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 ◇◇펀드가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 ◇◇ ◎◎ ◎◎ 1.5Y 3호 펀드 △△△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판매직원들은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투자권유에 활용

※ 기타 ◇◇자산운용의 펀드 제안서 허위기재(사례)

- 1) 브릿지론 투자 : 서울, 수도권 등 소재 LTV 70% 미만 사업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주, 충청 등 지방 소재 LTV 최대 113%인 사업장 등에도 투자
- 2) ABS 투자 : 확정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ABS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의 장래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사모사채에 투자 등

② 케이비증권은 펀드 선취판매수수료(△△억원)를 받는 대신 TRS 수수료 등으로 이를 보전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20××.×.××. 기간중 ◇◇ ■■■ 13호 펀드 등 11개 펀드 △△△△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펀드 제안서에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

** 판매직원들은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투자권유에 활용

※ TRS 수수료를 활용한 펀드 선취판매수수료 관련 수익인식(사례)

- 선취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TRS 수수료에 포함하여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한뒤, 부서간 내부손익 조정을 통해 상품기획부서에 이전

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1) ◇◇자산운용의 고유재산 등 이익 도모 행위 관련

□ ◇◇자산운용(이하 '◇◇')은 (주)▲▲▲가 20×.×.××. 발행한 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전환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주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 발생하자*,

* '××.×.××. ▲▲▲ 주식 종가 9,420원, CB 전환가액 1,894원

- 콜옵션* 행사로 인한 전환사채 매수대금은 ◇◇ 운용 펀드에서 지원하고 매수한 전환사채의 평가이익은 ◇◇ 고유재산 및 ▲▲▲ 관련 무자본M&A 세력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 ▲▲▲ 또는 ▲▲▲가 지정하는 자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액면가액의 105% 가격으로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40%(△△△억원)까지 동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20××.×.××. ◎◎자산운용(이하 '◎◎')에 권종형 펀드인 ◎◎ ●●● 6호를 설정하도록 한 후, ◇◇이 운용하는 ◇◇ ◆◆◆ ◆◆◆ ◆-◆호 등이 ◎◎ ●●● 6호 펀드의 1종 수익자(△△△억원)로 투자하게 하고, ▲▲▲ 관련자 및 ◇◇ 고유재산 등이 2종 수익자(△△억원)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 20××.×.××. ◎◎ ●●● 6호 수탁고의 93%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한 ◇◇ ◆◆◆ ◆◆◆ ◆-◆호 등의 1종 수익자에 대해서는 ◎◎ ●●● 6호 전체 평가이익의 0.07%(△억원)를 귀속시키고, ◎◎ ●●● 6호 수탁고의 7%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한 2종 수익자인 ◇◇ 고유재산 및 ▲▲▲ 관련자에게는 전체 평가이익의 99.93%(△△△억원)를 귀속시키는 등 ◇◇이 운용하는 ◆◆◆ ◆◆◆ ◆-◆호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 고유재산 및 ▲▲▲ 관련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는데 있어,

- 케이비증권 ●●●●●●●부는 1종 수익자의 자금으로 2종 수익자가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 함께 ◎◎에 소위 ‘OEM펀드’를 설정하게 하고 거래방식을 구체화한 액션플랜인 TRS 및 전환사채 거래구조(Project ○○○○○○)를 작성해주었을 뿐 아니라,
- ◇◇ 고유재산이 2종 수익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 ●●● 6호의 2종 수익권의 순자산가치를 추종하는 자체지수를 생성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 고유재산과 체결하는 방법으로 외관상 ◇◇ 고유재산이 ◎◎ ●●● 6호에 투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 1회차 전환사채 거래와 관련하여 ◇◇이 ◎◎의 권종형 펀드를 이용하여 1종 수익자인 ◇◇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의 자기 및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음

(2) ◇◇ ◎◎◎ 등의 이익 도모 행위 관련

- ◇◇이 무자본M&A 세력으로부터 (주)◇◇◇◇◇◇◇◇◇◇ 주식(△△만주)을 시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로 매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 20××.×.×. □□□□□자산운용(이하 ‘□□□□□’)에 100억원 규모의 ‘◆◆◆◆ 3호’ 펀드를 설정하여 ◇◇ ◆◆◆◆ ◆◆◆◆-◆호가 1종 수익자로 △△억원, ◇◇ 부사장 ◎◎◎ 및 무자본 M&A 세력이 2종 수익자로 △△억원을 투자하고,
- 20××.×.××. TRS 레버리지 등을 이용하여 ◇◇◇◇◇◇◇◇◇◇ 주식(△△만주)을 매수(△△△억원)하면서 90%의 자금을 투입한 1종 수익자인 ◇◇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2종 수익자가 대규모 평가이익* 취득하게 하는 과정에서,

* 거래당일 ◎◎◎은 △△억원, 기타 2종 수익자는 △△억원의 평가이익 발생

□ 케이비증권은 1종 수익자의 자금으로 2종 수익자가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 함께 ■■■■■에 소위 'OEM펀드'를 설정하게 하고,

○ 20××.×.××. '◆◆◆◆ 3호'의 증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 3호'가 저가에 매수(주당 △△△△△원)한 ◇◇◇◇◇◇◇◇◇◇ 주식 △△만주를 당일 케이비증권이 시가에 매수(주당 △△△△△원)하여 주는 방법으로 △△억원의 차익을 발생시켜 '◆◆◆◆ 3호'의 TRS 증거금 납부 자금으로 보충시켜주고,

- 나머지 △△만주를 케이비증권이 블록딜로 저가에 매수(주당 △△△△△원)한 뒤 케이비증권이 보유한 동 주식 총 △△만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 3호'와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케이비증권이 ◇◇◇◇◇◇◇◇◇◇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 등의 부당이득 취득을 위한 거래사실을 은폐해 줌으로써 ◇◇◇◇◇◇◇◇◇◇ 주식 △△만주 블록딜 거래와 관련하여 ◇◇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는 등

○ 20××.×.××.~20××.×.××. 기간중 ◇◇이 ○○○·■■■■·▽▽자산 운용(이하 '▽▽')의 권종형 펀드를 이용하여 1종 수익자인 ◇◇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2종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음

* 2종 수익자가 최소 투자금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1종, 2종으로 구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1종 투자자의 이익

(3) 자전거래 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관련

□ ◇◇은 20××.×.××. ○○○으로 하여금 ◇◇의 대형 펀드를 수익자로 하는 ○○○ '■■■■ 1호'를 설정하게 하여 운용하던 중, 20××.×.××. ◇◇ '▲▲▲ 3호'가 케이비증권의 TRS를 통해 보유 중이던 ○

○○○○○○○○ 전환사채(27회차, 액면가 △△억원)를 ○○ ‘■■■■■ 1호’에 이전(실질적 자전거래)하는 과정에서

- 케이비증권은 ○○ ‘■■■■■ 1호’가 소위 ‘OEM펀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 ◇◇ ‘▲▲▲ 3호’와 ○○○○○○○○ 전환사채 TRS계약을 청산하면서 당일 ○○ ‘■■■■■ 1호’와 신규 TRS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케이비증권이 전환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의 신탁계약, 연계거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을 이용한 위법한 연계거래를 은폐해주는 등 20××.×.~20××.×.××. 기간중 ◇◇ 및 ■■■■■의 타 운용사 펀드를 이용한 위법한 연계 자전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TRS계약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4) 투자자의 운용요청에 따른 펀드운용 금지 관련

- 케이비증권은 ◇◇이 ○○ 등 타 운용사에 ◇◇ 펀드 등을 수익자로 하는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 ■■■■■, ▽▽이 ◇◇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 ■■■■■, ▽▽에 펀드 설정 및 TRS거래 등을 이용한 운용을 은밀히 알선하고 운용지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사적 통신 수단 등을 통해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 ~ 20××.×.××. 기간중 ○○, ■■■■■, ▽▽의 명의로 설정·운용되는 총 20개 펀드가 ◇◇의 운용요청 등에 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부는 20××.×.××.~20××.×.××. 기간중 ■■■■■ 및 ■■■■■■■■■ 발행 전환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총 △△억△천만원을 수령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라. 공모주 차별 배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부분 ■■■이사는 20××.××.××.~××.××. 기간중 진행되었던 ■■■■■■■■■ 공모주 수요예측에 ○○○○○○○○의 기관투자자였던 ○○○○○○○보험 및 ◆◆◆◆◆중앙회가 참여한 사실을 알고,
- 향후 소송대응 및 우호적 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본부에서 배정그룹 변경 및 기여도 조정 등의 방법으로 ○○○○○○○보험 및 ◆◆◆◆◆중앙회에 ■■■■■■■■■ 공모주를 각각 ▲▲▲▲▲주 (▲▲▲▲주→▲▲▲▲▲주), △△억원씩 추가배정(△△억원→△△억원)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붙임)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9조(과태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79.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 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는 행위

4.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① 영 제68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 받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15 02-3145-7699